

영국의 긴축 재정 정책, 그리고 복지 국가의 후퇴

UK's Austerity Policy and Retreat of Its Welfare State

김기태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1. 동향

영국 복지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시발점은 지난 2010년 선거였다. 그해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 보수당은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동시에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새 정부의 구상은 2010년 6월에 나온 ‘비상예산(Emergency Budget)’과 같은 해 10월에 나온 ‘지출검토서(Spending Review)’를 통해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수당의 구상은 파격적이었다. 재정 긴축 정책은 앞선 노동당 정권도 구상했었지만, 그 감축의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보수당 연립정권의 구상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노동당이 724억 파운드의 연간 예산 적자액을 10년에 걸쳐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냈던 것에 견주어, 연립정권이 제시한 감축 규모는 1103억 파운드였다. 감축의 시한도 2015년으로 뜻을 박았다. 노동당의 구상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규모를 절반의 기간 안에 마치겠다는 것이었다.

예산 감축은 곧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를 의미했다. 연립정권은 2015년까지 공공서비스 지출을 357억 파운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0년 영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 규모가 1660억 파운드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에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의 5분의 1을 삭감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가운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도 5년 안에 177억 파운드를 삭감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른바 ‘복지삭감(welfare cuts)’이라 일컬어지는 대목이다. 노동당의 구상에서는 그나마 3억 파운드 가량 소폭 인상되기로 했던 예산이었다. 연립정부의 구상은 재정 감축을 통해서 복지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고, 재정 건전성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 삭감은 물론 유례를 보기 드문 수준이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원(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0)¹⁾은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이라고 논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립정권의 정책을 지지했다. 2010년 9월 IMF는 연립 정부의 정책이 “필수적(essential)”이며 앞으로의 “균형있는 경제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²⁾. 영국 정부의 극단적인 예산 감축 시도에 대해서도 IMF는 “재정 긴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만, 곧 다른 (민간) 부문이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의 재계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30여명의 영국 재계 인사들은 2010년 10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낸 연명 투고에서 “영국의 긴축 재정으로 민간 부문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영국의 경제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³⁾. 이 투고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디아지오, 맥스앤스펜서, 브리티쉬 텔레콤의 대표이사들이 대거 실명으로 참여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표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영국 정부는 2012년에 들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먼저 포문은 정부의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열었다. 예산책임청은 지난 2012년 7월에 2017~2018년까지 공공지출이 170억 파운드(가 추가적으로 줄거나 아니면 그 만큼을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⁴⁾. 그리고 세달 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6~2017년까지 복지재정을 추가적으로 100억 파운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조여진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2. 복지 삭감(welfare cuts)

2010년 연립 정부가 내놓은 재정 긴축 가운데 177억 파운드에 이르는 급여 삭감액은 이른바 ‘복지삭감’으로 일컬어진다. 연립 정부의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대목이기도 하다.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자.

연립 정부는 가장 먼저 복지 급여 인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줄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해마다 소매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급여를 인상해왔지만, 이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꿨다. 전통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주택 가격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소매물가지수보다 인상폭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기준은 연금을 제외한 모든 복지 급여 혜택에 일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58억 파운드를 절

1) “Post Budget Presentation” <http://www.ifs.org.uk/budgets/budgetjune2010/chote.pdf>

2) “IMF backs coalition spending cuts” BBC Business, <http://www.bbc.co.uk/news/business-11419937>

3) Osborne’s cuts will strengthen Britain’s economy by allowing the private sector to generate more jobs, Daily Telegraph, <http://www.telegraph.co.uk/comment/letters/8069609/Osbornes-cuts-will-strengthen-Britains-economy-by-allowing-the-private-sector-to-generate-more-jobs.html>

4) “Danny Alexander: we are making tough decisions on the economy,” Daily Telegraph, <http://www.telegraph.co.uk/finance/financevideo/9395387/Danny-Alexander-we-are-making-tough-decisions-on-the-economy.html>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에 대폭 줄어들게 되는 급여로는 아동급여(child benefit), 아동 및 노동 세액 공제(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거주 급여(housing benefit),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급여의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급여액도 3년 동안 동결됐다. 아동급여의 제도 변화로만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방 거주급여(local housing benefit)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 시세의 중간 수준에서 책정되던 기준을 30%로 하향 조정됐다.

연립 정부의 복지 삭감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⁵⁾. 첫째, 연금 수령자는 복지 혜택 감축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둘째, 노동 관련 급여는 주로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조정됐다. 셋째,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손실은 빈곤층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 대체로 연금 수령자와 부유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한편,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받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배경

영국은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⁶⁾, 2010년 기준 영국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은 85.5%로, 미국(61.3%), 프랑스(67.4%), 독일(44.4%) 등 서구 주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42.7% 수준이던 부채비율이 불과 3년 사이에 두배 이상 뛰어오른 것은 눈길을 끈다. 영국이 재정적자가 가장 심했던 2009~2010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무려 11%를 넘어서기도 했다.

영국 정부가 유독 재정 적자에 시달린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풀이된다⁷⁾. 첫째, 부실 은행 정리를 위한 재정 지출과 긴급 구제 조치, 둘째, 앞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점, 셋째, 2008~2009 회계연도에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데다 경기 침체에 세수가 감소한 점, 넷째, 노동당 정부가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을 주저한 점 등이었다.

위와 같은 원인은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영국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에서 재정 위기가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금융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크게 육성한 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위축되도록 방치해 왔다. 특히 1980년대 대처 정권 당시에 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5) Brewer M. & Browne J., Cuts to Welfare Spending In: Yeates, N., Haux, T., Jawad, R., Kilkey, M. eds. In Defence of Welfare: the Impacts of the spending review,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2011.

6) Central Government Debt,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OV_DEBT

7) Taylor-Gooby, P., Stoker, G. The Coalition Programme: A New Vision for Britain or Politics as Usual?,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2, No. 1, January~March 2011.

대폭 줄였다⁸⁾. 영국의 제조업은 그 뒤로 급격하게 위축됐다. 지난 2011년 <Financial Times>의 보도를 보면 영국의 제조업 규모는 한국보다 한 단계 뒤진 세계 9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이와 같은 금융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에 영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됐다. 금융 위기의 타격을 받은 은행 분야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키웠던 금융산업이 다시 거대한 빚더미로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당시 침몰하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시 고든 브라운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들—은행 구제, 산업 보조금 지급, 부가가치세 인하—은 경제의 급한 불은 꺾지만 결국 대규모의 정부 부채를 남겼다.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보수당은 결국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특히 집권 뒤에 보수당이 내놓은 극단적인 긴축 재정 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파악할 수 있다.

4. 평가

연립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립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이 실제로 민간 경제 부분의 활성화를 이끌어서 경기 침체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둘째, 정부의 복지 감축이 영국의 소득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로 갈라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적, 사회적 평가인 셈이다.

1) 경제 활성화

영국의 국내총생산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가, 2009년 2분기 이후 안정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성장과 위축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연립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2012년 들어서는 3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영국 통계청이 내놓은 [그림 1]을 보면¹⁰⁾,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고용 관련 지표는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생산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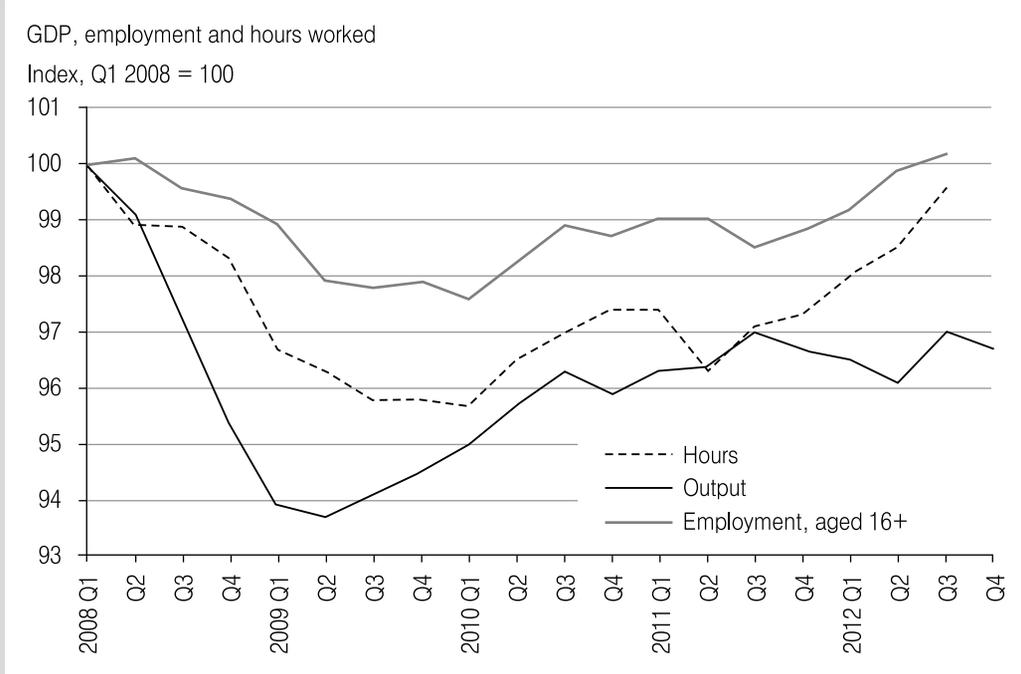
영국의 경기 침체는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거의 제로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양적완화 정책

8) Farnsworth, K, From economic crisis to a new age of austerity: the UK In Farnsworth, K. & Irving, Z., Social Policy in Challenging Times, The Policy Press, 2011.

9) UK falls behind Brazil in manufacturing, The Financial Times, <http://www.ft.com/cms/s/0/bed7943a-53b5-11e0-a01c-00144feab49a.html#axzz2LBZITbfu>

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and the Labour Market 2012 Q3- December GDP Update, http://www.ons.gov.uk/ons/dcp171780_293535.pdf

그림 1. 영국의 생산, 고용 지표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할만 수준이다¹¹⁾.

이와 같은 경제 지표는 영국 정부의 재정 감축 정책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낳고 있다. 일단 긴축재정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지금의 정책이 수요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이던 IMF가 입장을 바꾸어,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가 이제는 경기 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¹²⁾.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2012년 4월 “유럽을 지배했던 긴축 정책은 거대한 실패였다”라고 평했다¹³⁾.

영국 경제학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하게 갈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6월 50여명의 영국 경제학자들은 <더 옵저버>지에 낸 연명 기고를 통해서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 정부는 다급

11) 한국은행 런던사무소(2012). 동향분석자료: 영국경제의 회복부진 요인에 대한 평가.

12) IMF warns of threat to global economies posed by austerity drives,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2/jan/20/austerity-warning-international-monetary-fund>

13) Krugman, P. The Big Wrong, The New York Times,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4/25/the-big-wrong/>

히 Plan B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출 감축에 기반한 재정 적자 감축 정책은 자기 파괴적인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¹⁴⁾. 이들은 그린 뉴딜 정책과 선별적인 산업 지원 정책,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인상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달 역시 9명의 경제학자들은 같은 신문에 같은 형식의 연명 기고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들은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효과는 상쇄될 것이고, 결국 모든 정부 부채만 도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¹⁵⁾. 결국 보수당이 끈질기게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라는 요구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12년 11월에 낸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해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¹⁶⁾.

경제 지표만 보면, 영국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이 적어도 2012년말까지는 뾰족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은 물론 속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장 중립적으로 평가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2012년 1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 정도일 듯 하다¹⁷⁾. “경제학자들

이 최종적인 답을 주기까지는 아마도 수십년이 걸리거나, 아마 그때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듯 하다. 정책결정자들은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만으로 판단하자면,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집행된 긴축 재정 정책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듯 하다.”

2) 재분배 효과

영국 정부는 2010년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감소와 세수 확대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는 주거급여, 장애생활급여 등 다수의 급여 제도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재정연구원(Institute of Fiscal Studies)은 같은 해 내놓은 ‘세제와 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소득 분배 분석’ 보고서¹⁸⁾를 통해 정부의 추산치에 누락된 부분까지 지적하면서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소득 수준으로 10분위로 나눈 것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유한 계층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림에서 하얀 꺾은선으로 그려진 것이 세제와 급여 변화에 따른 소득 계층별 소득 감소 비율을 나타낸다. 내용을 보면,

14) Coalition's spending plans simply don't add up, The Observer, <http://www.guardian.co.uk/theobserver/2011/jun/05/observer-letters-centre-left-economic-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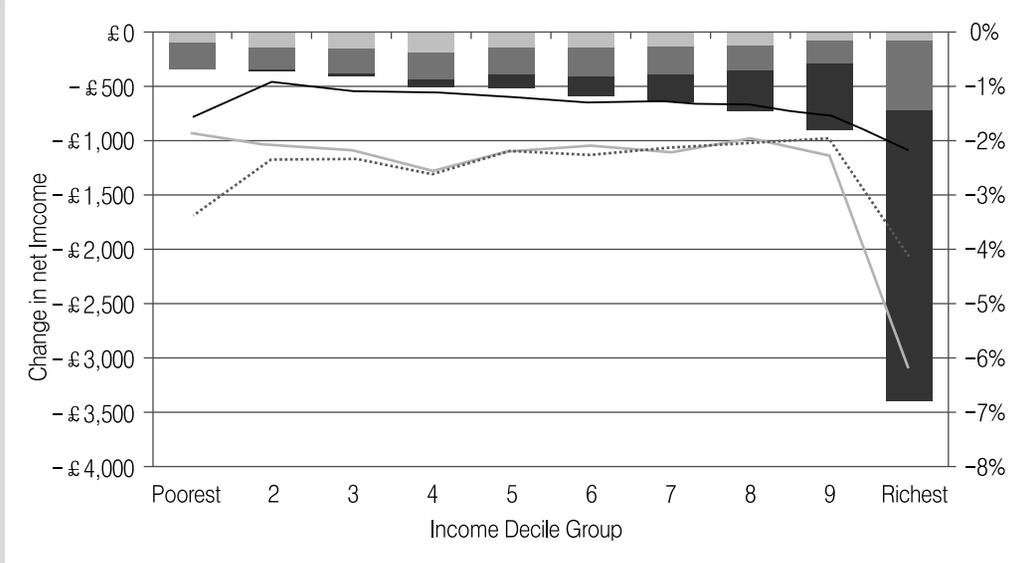
15) The Coalition must stick to its guns on the economy, The Observer, <http://www.guardian.co.uk/theobserver/2011/jun/12/observer-letters-coalition-economic-crisis>

16) OECD slashes 2013 growth forecast, The Financial Times, <http://www.ft.com/cms/s/0/92bb1a16-3874-11e2-981c-00144feabdc0.html#axzz2LBZITbfu>

17) Shiller, R. 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Project Syndicate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does-austerity-promote-economic-growth->

18) Institute of Fiscal Studies, Distributional analysis of tax and benefit changes, 2010, <http://www.ifs.org.uk/publications/5313>

그림 2.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비율



자료: IFS(2010). Distributional analysis of tax and benefit changes.

소득 상위 10%의 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90% 인구 사이에서의 정책 효과는 오히려 역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립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역진적인 데는 복지 급여 제도의 변화도 원인이지만, 세제의 변화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상위 10%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는 연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50%로 인상한 효과가 컸다. 그러나 이 정책은 보수당이 입각하기 전 노동당 정권에 의해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였다. 오히려 보수당 정부는 법인세를 28%에서 24%로 인하하는 대신, 오히려 대표적

으로 역진적인 세제인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로 올렸다. 이와 같은 변수들로 인해서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 셈이었다. Fransworth는 “이러한 세제 변화로 이미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결국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¹⁹⁾.

5. 의미

Taylor-gooby는 영국의 재정 정책의 변화가 단순히 복지 삭감(welfare cuts)이 아니라 복지

19) Farnsworth, K, From economic crisis to a new age of austerity: the UK In Farnsworth, K. & Irving, Z., Social Policy in Challenging Times, The Policy Press, 2011.

구조 조정(welfare restructuring)이라고 설명한다²⁰⁾. 그는 먼저 연립정부가 무리해서 복지삭감을, 혹은 복지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를 네가지 원인으로 나누어서 풀이한다. 첫째, 정치적인 요인이다. 영국의 제 3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보수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급진적인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는 설명이다.

둘째, 정책적인 요인이다. 연립 정부가 저비용 복지 제도를 영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처 수상 이래 대부분의 정권은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대부분 지출은 3~7년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보수당은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저비용 구조를 영국 복지모델에 이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요인이다. 영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더 시장 친화적인 유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부담'인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설명이다.

넷째, 세계화(globalization)와 탈산업주의(post-industrialism) 요인에 따른 설명이다. 세계 시장에서 일국 정부가 개별 국가 단위에서 펼 수 있는 정책의 여지도 줄어들면서, 복지국가가 공공지출을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개념 자체가 낡은 것인양 취급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빈곤과 실업 문제는 점점 더(개별 국가의 문제

가 아니라) 갈수록 국제화하는 시장의 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Taylor-gooby, 2012; 124)." 이는 "금융억압을 수반하는 케인지안 경제정책과 복지제도의 조합은 지구화, 금융화하는 과정에서 존립하기 어려워졌다²¹⁾"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영국 사회복지의 변화는 양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IMF(2010)가 제시한 추정치를 보면, 연립 정부의 계획대로 긴축 재정 정책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영국의 공공지출 비율은 G7 국가의 평균을 밑돌 뿐더러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밑돌게 된다.

Taylor-gooby는 영국 복지국가가 가리키는 방향을 '월마트 복지 국가'로 설명했다. "영국 복지국가의 여러 특징들-낮은 급여 수준, 엄격한 급여 혜택 조건, 노동 시장 참여한 대한 강한 인센티브, 민간의 복지 서비스 공급, 사회적인 포용의 약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은 미국의 복지국가와 제도와 닮아 있다²²⁾." 영국 연립 정부가 그리는 복지국가의 구상은 영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정책교환(Policy Exchange)가 2012년 낸 보고서 'Welfare Reform 2.0'에서도 엿볼 수 있다²³⁾. 특히 이곳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수상의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정책교환은 이 보고서에서 복지 급여에 대한 혜택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복지 분야에 시장적인 요소를 더욱 강하게 주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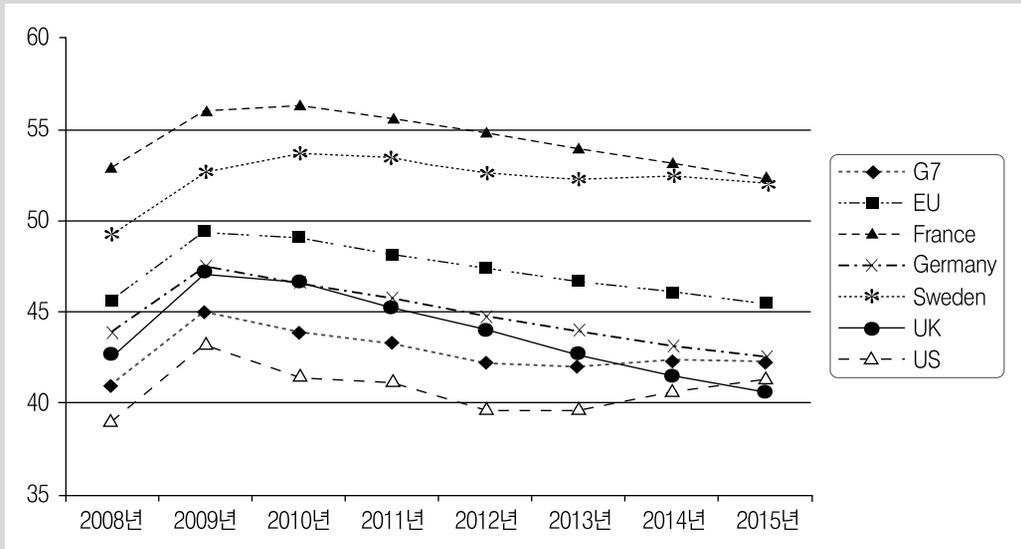
20) Taylor-Gooby(2012). Overview: resisting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the UK, The Policy Press, 20(2).

21) 주은선(2011).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진로, 사회복지연구, 42(2).

22) Taylor-Gooby(2012). Overview: resisting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the UK, The Policy Press, 20(2).

23) Oakley, M.(2012). Welfare Reform 2.0, Policy Exchange.

그림 3. 주요 국가들의 공공지출 추이(GDP 대비 비율)



자료: IMF(2010) Long-term Trends in Public Finances in the G7 Countries, Talyor-gooby(2012) The UK welfare state going west 재인용

다. 아울러 “정부가 복지국가에 대한 개혁을 더욱 강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복지국가 개혁안’이 다음 총선을 전후해서 법안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영국의 다음 총선은 2015년 5월에 예정돼 있다. 그때가 영국 복지국가의 향방을 가르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쯤 영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이미 미국식으로 성큼 변화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보수당의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 견

줘,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및 시민사회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탓이 크다.

Farnsworth의 전망은 그래서 우울하다. “사회 정책의 미래에 희망을 걸려면, 정부가 시민들의 저항에 밀려서 긴축 재정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 삭감으로 이미 쇠약해진 경제를 더욱 망치고, 사회조직을 망가뜨리기 이전에 말이다. 영국 경제는 현재의 위기로부터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다. 영국의 복지국가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²⁴⁾.” 보건복지

24) Farnsworth, K, From economic crisis to a new age of austerity: the UK In Farnsworth, K. & Irving, Z., Social Policy in Challenging Times, The Policy Press, 2011.